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0-직권-00003 학생인권침해 사안 부적절 처리 등
피 해 자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피조사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교육청 등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이미 발생한 폭력뿐 아니라, 유사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제 교원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였을 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현재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기간제 교사 인력풀 운영계획 포함)을 학생인권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 교육할 것을 권고한

다.

나. ○○○○학교와 같은 사례(기간제 교사가 성폭력 가해혐의로 신고되자 당일 의원면직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등이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기간제 교원과 관련하여 학생인권침해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업무처리 미숙에 기인한 것이므로,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3. ○○○○학교 교장에게

기간제 교원 관련하여 학생인권침해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은 학교의 업무처리 미숙에 기인한 것이므로,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실시 배경

○○교육지원청이 2020. 10. 27.(화) ○○○○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의 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사안보고를 하였고, 다음날인 10. 28.(수) 학교를 방문하여 기초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학교가 위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가해혐의자인 기간제 교사 사직 처리)을 확인하였다.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과정이 학생의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5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직권조사 사건 요지

2020. 10. 12.(월) 온라인 수업 기간 중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교가 이 사안을 처리하면서 가해 혐의자인 기간제 교사의 사직서를 제출받고 의원면직 처리를 하였다.

3. 조사 방법과 경과

가. 조사 방법: 관련자 면담 조사, 관련 서류 조사 등

나. 조사 경과

- 2020. 10. 12.(월) ○○○○학교 ○○실에서 사건 발생
- 2020. 10. 22.(목) 학교 사안인지(담임교사)
 - 교육지원청 사안 처리 안내
 - 경찰신고
 - 가해 혐의자 사직서 제출
 - 학교 인사위원회 개최(계약 해지)
- 2020. 10. 27.(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보고
- 2020. 10. 28.(수) 학교 방문 기초조사(관련 기록, 관련자 면담 등)
- 2020. 11. 12.(수)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전화통화 조사

II.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붙임 1]과 같음

2. 관련자들의 주장 및 관련 자료

가. ○○○○학교 학교폭력 담당자(학교장 포함)의 주장

2020. 10. 22.(목) 담임교사를 통해 최초 인지한 후,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하고,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에게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컨설팅) 받았다.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의 컨설팅에서는 가해혐의교사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같은 날, 경찰(학교전담경찰)에 신고한 후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회의결과에 따라 학생, 가해협의 교사,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가해협의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협의자를 의원면직 처리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담당 장학사는 가해협의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확인)하였다.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의 주장

2020. 10. 22.(목)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 받은 후, 학교 교감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가해협의 교사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컨설팅 한 바 없다.

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기간제 교사 담당자의 주장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학교가 인사과로 통보한다. 의원면직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관련 사안 내용을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 내용에 따라, 기간제 인력풀 사항 비고란에 기재하며, 기간제로 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학교장의 판단(징계와 비슷)으로 계약해지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고하며,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기간제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에도 중도해지 하였고, 그 사유를 보고한 사항이며, 현재 채용제한이 걸려 있으며, 채용제한 사유는 성비위이다.

라.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20. 1. 1. 시행)¹⁾

1) 2020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중 “결격사유 조항, 임용기간중 계약해지, 채용의 제한” 등 일부를 개정하여, 2021. 1. 1. 시행 예정임. { 교원인사과-21382.(2020. 11. 19.) }

- 임용 결격 사유조회(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범죄유무, 행정처분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조회 요청함(5~6쪽)
- 임용 기간 중 계약해지: 아래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 가능(7쪽)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 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휴직교원의 조기 복직, 결원의 보충 등 임용사유 소멸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계약서에 해지조건으로 명시)
 - 특정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 정규교원의 경우라면 해당될 직위해제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성비위 관련 계약해지 시 교육청에 보고)
 - 기타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채용의 제한(7~ 8쪽)
 -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채용 금지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금품수수 행위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임용 제한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채용기관장은 관할 교육청에 임용보고 시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고, 해당 기간제교원은 채용 제한 및 인력풀 등재 제한 또는 승인 취소

○ 행정사항(24쪽)

- (의무사항)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된 자 중에서 우선 채용(인력풀 등재과목의 경우)

3. 인정사실

관련자의 주장과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학생인권침해 관련 기간제 교사 의원면직 관련

- 삭제

나. 계약제교원 운영관련

1) 전라북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지침은 계약제 교원의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와 채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2) 전라북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력풀 운영 과목(국어, 영어, 수학, 체육 등 19개 과목)의 기간제 교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전라북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기간제 교원 인력풀에 ○○○○학교 ○○교사였던 가해혐의자는 현재 성비위로 채용제한(비고란 기재)에 걸려
에 걸려 있다.

3. 판단

가. 총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 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란, 학생이 직접적으로 ‘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하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학생이 폭력을 당했을 때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을 회복할 권리’, ‘폭력을 예방할 의무’를 모두 포함할 때,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나.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여부

기간제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매뉴얼(학교폭력처리 매뉴얼,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등)에 따라, 가·피해자를 분리한 상태에서 피해자 상담(조사), 가해자 상담(조사) 후, 사안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안을 특정하고, 학교장의 신고의무 이행(경찰 신고), 교육청 보고(컨설팅 포함),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피해자 보호 결정, 가해자 처분 권한 없음) 개최, 필요시 가해자 처분을 위한 학교 인사위원회 개최, 각종 회의 결과를 집행(학생 보호, 가해자 처분 등)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가.항의 ○○○○학교 사안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사안을 신고한 당일 기간제 교사의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처리를 한 것은 일반 교사와 비교하여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볼 수 없고²⁾, 둘째, 기간제 교사의 의원면직은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해당 교사의

2)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신원조회 후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최종 사직처리(통상적으로 2~3주 소요)가 됨. 이는 면직이 되었을 경우 각종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원상회복, 회수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각종 비위 행위를 각급 기관이 방조 또는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사직서에도 이 사유로 기재되어 있음)’로 사직한 것이 되므로(○○○○학 교가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문서에도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사유는 의원면직임) 해당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축소·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셋째,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므로 다른 학교에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가능성³⁾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학교와 교육지원청⁴⁾이 학생인권침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폭력을 예방하는데 부적절한 처리에 해당되므로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계약제 교원의 인력관리의 문제

‘2020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 따르면, 계약제교원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 교원’을 말하며,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침은 임용 절차에 따른 제출 서류, 결격사유조회(범죄경력조회 등), 임용기간 중 계약해지, 채용의 제한, 의무 및 우선채용, 복무, 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용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직권면직)고 규정하고 있다.

3)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은 위와 같이 의원면직 처리된 경우 기간제 교원 인력풀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4)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처리한 것에 대해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지침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제 교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학생인권침해 사안으로 타 학교에서 임용기간 중 계약을 해지했을 때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을 인력풀로 등록하고, 이 인력풀에 등록된 교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력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2020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중 결격사유 조항,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학생인권침해 사안으로 타 학교에서 임용기간 중 계약을 해지했을 때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인력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2021. 1. 1.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계약제 교원의 인력관리”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개정된 ‘2021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1. 1. 1. 시행 예정)’에도 기간제 교사의 의원면직⁵⁾ 처리기준(의원면직 제한 사유) 등을 마련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이, 지침(기간제 교원 인력풀 기본계획 포함)이 학생인권침해 사안 관련한 기간제 교원의 의원면직 처리 기준과 절차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학교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 침해(폭력)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지침 등이 미비하여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5) 면직의 경우, 의원면직(본인의 의사, 사직서 제출시), 직권면직(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계 등의 사유로 임용권자가 면직), 당연면직(정년 등으로 임용관계가 소멸되는 면직) 등으로 나눌 수 있음. 계약제 교원의 경우, 의원면직이 문제가 되는데, 위 지침은 의원면직에 대해 따로 정해놓은 규정이 없음.

다. 소결

위와 같이, 기간제 교원 관련하여 학생인권침해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미비,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업무처리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이미 발생한 폭력뿐 아니라 유사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라북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을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비록 지침이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인권에 우호적인 관점 또는 인권감수성이 높았다면 적절한 방법을 찾아 해소할 수 있었으므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Ⅲ. 결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0. 11. 23.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경아 (인)

[붙임1]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